

## 한국인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형평성 지각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 한 나\*  
(연세대학교)

이 미 라  
(연세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태도와 형평성지각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친복지적 태도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자료(2007) 중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복지태도는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 '소득격차 해소에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으로 측정하고, 독립변수인 형평성지각은 '소득분배 형평성지각'과 '세금부담 형평성지각'으로 나누어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소득분배 형평성 수준을 낮게 지각할수록 성장보다는 분배를 지향하는 것으로, 둘째, 소득분배 형평성 수준과 세금부담 형평성 수준을 낮게 지각할수록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국가책임이 보다 크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소득분배 형평성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지각 수준과 선별주의·보편주의의 지향 간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비판적 낙관주의'에 대한 개입과 복지태도의 이중성을 극복하고 세금납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촉구하였다.

주요용어: 복지태도, 성장과 분배,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소득분배 형평성지각, 세금부담 형평성지각, 비판적 낙관주의

\* 교신저자: 이한나, 연세대학교(E-mail: nazlove@paran.com)

■ 투고일: 2010. 6. 10    ■ 수정일: 2010. 8. 11    ■ 게재확정일: 2010. 8. 17

## I. 서론

복지형태는 각 시대와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과 신념체계에 의해 변화해 왔으며 (George & Wilding, 1994), 복지국가 정당성의 기반이자 복지국가의 미래를 예측하는 유용한 준거로서의 복지태도(최균·류진석, 2000)<sup>1)</sup>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수차례 강조되어 왔다. 복지태도가 복지정책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력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어 온 것(Page & Shapiro, 1983; Brooks & Manza, 2006; 이중섭, 2009 재인용)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며,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제 모델에서 '사회성원의 관련 이슈 인식'을 첫 단계로 들며 정책의 집행과 평가, 피드백 단계에서도 국민의 인식을 주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Eyestone, 1978; Jones, 1984)은 사회성원의 인식이 정책형성의 전 단계를 관통하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대중의 인식과 태도가 복지정책의 도입과 집행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지 않았다(주은선·백정미, 2007). 그러나 해방 이후 꾸준히 전개되어 온 변화에 대한 열망과 아래로부터의 역동은 형식적 민주화와 정권교체를 이끌어 내며 대중의 인식과 행동이 현실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으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핵심적 복지제도의 도입과 변경과정에서의 논쟁들은 국민의 인식과 여론이 국가의 정책결정에 주요한 변인이며, 앞으로 그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을 실감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친복지적 제도의 도입과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 인식에 따라 국내에서도 복지태도의 영향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어 왔다. 김신영(2010)은 국내의 복지태도 관련 연구를 복지태도의 구성개념을 파악하고 측정도구를 개발한 연구(최균·류진석, 2000), 복지태도의 사회집단별 실태에 대한 기술(김상균, 1985; 김성한, 1990; 양옥경, 2002; 백정미 외, 2008; 허

---

1) 복지태도, 복지인식, 복지의식은 선행 연구를 통해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식과 태도를 구분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는 '복지태도'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자 한다. 단, 인용에서는 최대한 연구자가 사용한 원 용어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2장에서 진행한다.

만형, 2009),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김영모, 1980; 김상균·정원오, 1995; 주은선·백정미, 2007; 안상훈, 2009; 이중섭, 2009)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선행연구에서 발견되는 공통점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복지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차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는데, 일반적으로 복지지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중섭, 2009), 국가복지책임에 대한 지지도(이성균, 2002; 백정미 외, 2008; 김신영, 2010),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의 긍정성(양옥경, 2002) 등 국가가 행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연구자에 따라 수혜대상 또는 영역을 나누어 측정하기도 하였으나(이중섭, 2009; 김신영, 2010), 이는 큰 틀에서 국가에 의한 복지확대에 대한 찬반의 틀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복지태도는 ‘국가 주도의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또는 감소에 대한 태도’로 조작적으로 정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김신영, 2010), 평등과 분배에 대한 인식, 빈곤원인과 공공복지 수급자에 대한 인식 등의 규범적 인식은 복지태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어 왔는데(이중섭, 2009), 이는 ‘복지인식’과 ‘태도’ 용어의 모호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선행연구가 설정한 복지태도에 대한 영향요인이 제한적이었다는 한계를 들 수 있다. 기존연구는 독립변수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종사상 지위 등 사회적 계급과 복지태도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다(Blomberg et al., 1996; Bradshaw & Mayhew, 2004; Wong et al., 2009; 김영란, 1995; 안치민, 1995; 김희자, 1999; 우아영, 2000; 조돈문, 2001; 주은선·백정미, 2007).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는 것은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다소 평면적 해석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백정미 외, 2008), 또한 친복지적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주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이와 같은 제한점을 고려하여 복지태도가 개인의 사회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지각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며, 사회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 변수로 ‘형평성지각’을 설정하고자 한다. 형평성지각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태도가 인지, 감정 및 행동의도의 3요소를 지니는 지속적인 경향이라는 정의와 관련된다(Rosenberg & Hovland, 1960; Breckler, 1984; 한덕웅 외, 2008 재인용). 태도의 세 요소 중 인지적 요소는 인식(cognition)과 지각(perception)을 포괄하는데,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는 두 용어가 구분될 때는 인식은 태도대상의 존재

를 알게 되고, 지각은 태도대상에 대해 인상과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태도 이론에서는 인식의 후속과정인 지각에 대한 반응으로 행위나 태도가 형성되며, 주관적 지각은 사회적 관계나 상호작용의 양상을 결정하며 사회적 행동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전제한다(Fishbein & Ajzen, 1975; Fazio et al., 1983). 이는 태도의 하위요소인 인지적 요소가 전체 태도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단초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즉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복지태도’가 ‘감정’과 ‘행동의도’를 포함하는 선호와 신념, 지향성을 가지는 변수라고 할 때, 이에 인지적인 요소, 즉 ‘지각’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지각’과 ‘선호’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복지인식’의 범주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가치적 지향’만을 측정함으로써 두 변인 사이의 관련성을 고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sup>2)</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태도를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 소득격차 해소에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 등 네 가지 하위 변수로 개념화하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인 형평성지각을 세금부담 형평성지각과 소득분배 형평성지각으로 설정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 II. 문헌 연구

### 1. 복지태도

복지태도(welfare attitudes)는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지지여부, 복지비용의 문제, 재분배, 복지국가의 정당성 등에 대한 사회적 흐름 내지는 사회적 태도를 의미한다(Taylor-Gooby, 1985; 최균·류진석, 2000 재인용). 복지태도와 유사하면서 보다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로 ‘복지인식’ 또는 ‘복지의식(welfare consciousness)’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사회의 정치경제적 기반 위에 사회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

2) 이중섭(2009)은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사한 맥락에서 ‘이데올로기적 요인’을 고려하였는데, 이데올로기 요인 역시 특정한 가치에 대한 선호와 지향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태도형성이론에 따라 주관적 지각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한 생각과 가치관 또는 태도(양옥경, 2002)', '인간의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제도 또는 사회복지체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가치지향과 태도(김상균·정원오, 1995)' 등으로 정의된다. 복지의식과 복지태도는 학자에 따라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하고 구분되기도 하는데, 이종섭(2009)은 복지의식을 '복지 및 그와 관련된 사회현상들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의 내용'으로, 복지태도를 '복지의식에 기반한 행동성향'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는 복지의식을 태도의 구성요소에서의 인지적 측면으로, 복지태도를 행동의지적 측면으로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복지의식의 개념을 확장하여 그 안에 행동성향을 지칭하는 태도를 포괄한 정의도 있는데(김상균·정원오, 1995; 박병현·홍봉선, 1995),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되, 주관적 인식을 넘어서서 복지의 확대와 축소에 대한 선호와 비선호에 대한 포괄을 강조하기 위해 종속변수로서 '복지태도'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태도의 하위범주와 영향요인으로서의 '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의미이기도 하다.

선행연구자들은 복지태도 또는 복지의식을 개념화하는데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의 구성개념을 살피거나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여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정도(Elm & Clive, 1993; Edlund, 1999; Svallfors, 2004; Blekesaune, 2006; Koster, 2008; 박병현·홍봉선, 1995; 신섭중·박병현, 1995; 우아영, 2000; 이성균, 2002; 백정미 외, 2008; 임완섭·김문길, 2008)로 개념화되거나, 조세 및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출 지지정도(Hansenfeld & Rafferty, 1989; Svallfors, 1995; Gemmell et al., 2003; Cybelle, 2004; Goerres, 2007; Goren, 2008; Matthews & Erickson, 2008; 김상균·정원오, 1995; 김영란, 1995; 안치민, 1995; 우아영, 2000; 임완섭·김문길, 2008; 류만희·최영, 2009) 등으로 개념화해 왔으며, 선행연구에 의해 제시된 복지태도의 측정지표는 다음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하위요소와 함께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가치지향을 고려하여 복지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차원으로 첫째,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 둘째, 소득격차 해소에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 셋째,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넷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을 설정하였다. 이상의 네 가지 요소의 설정 근거는 최균·류진석(2000)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동 연구자는 복지의식의 차원을 '가치차원', '태도차원',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과 '복지의 적극적 실천의지'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

표 1. 복지태도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

구분	복지 책임 주체	영역별 복지 지출	복지 확대 증세	복지 실천 의지	평등 인식	사회 복지 효과성	비고
김상균·정원오(1995)		●					
김영란(1995)	●	●	●			●	
박병현·홍봉선(1995)	●	●	●				
안치민(1995)	●	●	●			●	
우아영(2000)	●	●	●		●		
최균·류진석(2000)	●			●	●	●	사회복지의 실시목적
양옥경(2002)	●					●	복지정책육구
이성균(2002)	●						
주은선·백정미(2007)		●		●	●		
백정미 외(2008)	●						
임완섭·김문길(2008)	●		●				
허순임(2008)	●						보건정책만족도
김신영(2010)	●						
이중섭(2009)		●					
Hansenfeld & Rafferty(1989)		●		●			
Edlund(1995)	●						
Svallfors(1995)		●					복지정책 운용에 대한 태도/ 복지재원출처/복지전달체계
Blekesaune & Quadagno(2003)	●						
Cybelle(2004)		●					
Svallfors(2004)	●	●					복지정책 운용에 대한 태도/ 복지재원출처/복지전달체계
Blekesaune(2006)	●						소득의 평등한 재분배 또는 개인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Goerres(2007)		●					
Koster(2008)	●						
Matthews & Erickson(2008)		●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은 ‘가치차원’에, ‘소득격차 해소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는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에,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는 ‘복지의 적극적 실천의지’에 각각 상응하여 복지태도의 세 차원을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태도차원’은 본 연구의 전제에 따라 다른 세 차원을 아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가.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은 복지태도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 복지에 대한 근본적 대립 축으로 존재한다. 특히 한국사회는 정권을 막론하고 경제성장을 제일의 국가목표로 인식하여 권위주의 정부와 군부독재가 정당화되어 온 성격이 강했고, 민주화 이후에도 대부분의 국가과제에 우선하는 절대적 목표로 엄존해 왔다. 경제규모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름에 따라 성장과 분배가 호혜적 관계로 상생할 수 있으며, 양자가 서로에 대한 촉진제로 작용해 온 경험이 보고되고 있으나(박순일, 2005),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분배의 지연, 즉 복지제도의 지연을 통한 위기 극복이 일관되게 강조되어 왔고, 분배에 대한 강조가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켜 온 것을 경험한 한국사회에서는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하느냐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 온, 빼 놓을 수 없는 복지태도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에 관한 연구로, 주은선·백정미(2007)는 복지인식의 하위차원으로 ‘평등인식’을 설정, 성장을 위한 불평등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으로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을 측정하였다. Mads(2006)는 13개 유럽국가의 분배에 대한 동의정도를 재분배태도로 정의하여 국가 레짐과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Svallfors(1997)은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데이터를 활용하여 5개국의 재분배에 대한 태도를 비교연구 하였다.

## 나. 소득격차 해소에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

‘복지시행 주체로서의 국가책임’의 이슈는 복지국가 담론의 중심에서 있으며,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 짓는 핵심적 지표 중 하나이다. 국내·외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복지태도를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정도(Elim & Clive, 1993; Edlund, 1999; Svallfors, 2004; Blekesaune, 2006; Koster, 2008; 박병현·홍봉선, 1995; 신섭중·박병현, 1995; 우아영, 2000; 이성균, 2002; 백정미 외, 2008; 임완섭·김문길, 2008)로 개념화해 온 경향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빈곤을 비롯한 제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책임과 개인책임의 이슈(Koster, 2008), 국가, 시장, 민간비영리 등으로 다원화된 복지공급주체에 대한 선호의 이슈(최균·류진석, 2000) 등도 이와 같은 범주에 포함된다. 또

한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책임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대상(Blekesaune & Quadagno, 2003; Svallors, 2004; 박병현 · 홍봉선, 1995; 우아영, 2000; 최균 · 류진석, 2000; 이성균, 2002; 백정미 외, 2008)과 교육, 일자리, 보건의료 등 세부영역별(Svallfors, 1997; Edlund, 1999; Blekesaune & Quadagno, 2003; Svallfors, 2004; 양옥경, 2002; 이성균, 2002; 주은선 · 백정미, 2007; 백정미 외, 2008; 이중섭, 2009)로 나누어 각 분야와 영역에 대한 국가책임정도를 측정한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국가책임은 이와 같은 국가의 전반적인 복지책임 중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 다.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재정책확보가 필수적이며, 재정책확보는 대부분의 경우 세금의 증가를 수반한다(김신영, 2010). 복지관련 정부지출에 대한 지지, 또는 이를 위한 증세에 대한 동의도 복지태도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는데, 이와 관련된 지표는 복지예산 증가에 대한 태도(Cybelle, 2004; Goerres, 2007; Matthews & Erickson, 2008; 최균 · 류진석, 2000; 이중섭, 2009), 이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박병현 · 홍봉선, 1995; 신섭중 · 박병현, 1995), 이에 따르는 증가된 세금 납부에 대한 태도(Hansenfeld & Rafferty, 1989; 최균 · 류진석, 2000; 주은선 · 백정미, 2007)의 세 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세 수준은 후자로 갈수록 재원 부담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히게 된다는 점에서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증세에 대한 태도로 측정하였다.

#### 라.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

선별주의와 보편주의<sup>3)</sup> 원리는 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에 관한 가치로, 복지서비스를

---

3) 선별주의(selectivism)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개인적 욕구(individual need)에 근거를 두고 제공되며 자산 조사(means test)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며, 보편주의(universalism)는 사회적 권리로서 전 국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론(Gilbert & Specht, 1974)이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및 범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운동이나 사회민주주의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추구하고, 이에 반해 선별주의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특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재의 복지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북유럽 국가들이 선별주의적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수혜의 범주에서 부유층을 배제함으로써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과거의 사실을 볼 때 이와 같은 구분이 항상 일관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미야모토, 2005), 복지정책을 입안할 때에도 진보와 보수가 교차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은 사회복지 이데올로기의 핵심적인 요인이며(허만형, 2009), 복지국가의 유형을 구분하는 하나의 지표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었으며, 현대 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실증적 연구에서 이를 복지태도의 하위차원으로 파악하여 다룬 것은 매우 제한적어서, 허만형(2009)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최적보장과 최소보장’,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회통합과 개인주의’, ‘이타주의와 이기주의’라는 사회복지 이념성향 간의 관계를 분석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 2.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연구에 나타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요인, 주관적 인식요인, 레짐요인으로 구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소득, 직업유무, 직업부문, 종사상 지위 등과 같이 일정 시점에서 개인에게 귀속된 불변의 상태인 변수들을 의미한다. 성별변수의 경우 Andress & Heien(2001)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복지 지향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Blomberg et al., 1996; Svallfore, 1997; Edlund, 1999; Scott et al., 2001; Blekesaune & Quadagno, 2003), Edlund(1999)는 성별에 의한 복지인식 차이가 국가제도, 직업, 노동강도 등 사회적 여건과 맥락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러한 성 차이는 가치체계 및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상황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백정미 외, 2008). 연령은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복지 지향적이라고 발표된 연구가 있는 반면(Hansenfeld &

Rafferty, 1989; Andress & Heien, 2001; 주은선·백정미, 2007), Blekesaune & Quadagno(2003) 및 Blekesaune(2006), 김신영(2010)은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 지향적이라고 보고했으며, 연령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관계 차이와 관계가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백정미 외, 2008). 교육은 복지의식을 공고히 하거나 복지의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써(백정미 외, 2008),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복지 지향적이라고 보고된 바 있으며(Andress & Heien, 2001, Goerres, 2007; 주은선·백정미, 2007; 임완섭·김문길, 2008) 이는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체계를 습득하고 내면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이중섭, 2009). 그밖에 혼인상태(김신영, 2010)와 거주지역(임완섭·김문길, 2008)도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과 직업보유여부 및 종사상 지위와 직업부문(민간부문·공공부문)과 같은 직업특성 역시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Svallfors, 1995, 1997, 2004), 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수록(김신영, 2010), 공공복지 수급경험이 있거나 사보험에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는 등 소득계층의 지위가 낮을수록(Hansenfeld & Rafferty, 1989; 주은선·백정미, 2007) 복지에 긍정적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소득과 고용관련 요인을 사회적 계층 변수로 대변해 분석한 연구도 많다. Svallfors(1997, 2004)는 국가개입에 대한 태도와 시간에 따른 복지지출, 재원조달, 서비스전달에 대한 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레짐에서 계층의 영향력이 나타났다고 발표했고, Bradshaw & Mayhew(2004)도 20년간 영국의 사회계급간 복지의식의 차이를, Blomberg et al.(1996)은 핀란드의 계급간 복지의식 차이를 연구하였고, Wong et al.(2009)은 홍콩의 사회계급에 따른 복지의식 차이를 조사하여 미국과 스웨덴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홍콩의 경우 계급의 영향력은 미미한 정도임을 보고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개인의 계급적 지위가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낮으며(김신영, 2010), 이러한 이유에 대해 특수고용형태의 발달로 인하여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계층의 빈민화로 인해 노동계층의 계층적 동질성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주장하고 있다(주은선·백정미, 2007; 김신영, 2010 재인용). 우아영(2000)은 실업자집단, 구중간계급, 신중간계급, 자본가계급으로 사회 계층을 분리하여 복지의식을 측정하여 한국사회의 각 계급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복지제도에 찬성을, 이익과 대립되는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이중적 복지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써 주관적 인식요인은 사회에 대한 신뢰, 복지정책 만족도, 수급자에 대한 인식, 정치이념(이데올로기) 등을 의미한다. 김신영(2010)은 사회에 대한 신뢰와 복지 인식 간의 정적인 관계를, 허순임(2008)은 기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해당부문 복지지출증가에 대한 지지의 부적 관계를 보고하였다. 정치이념(이데올로기)은 물질적·비물질적 상품이 사회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방식, 즉 분배정의와 관련되는데, 이는 평등주의와 반평등주의로 대변될 수 있으며 대체로 통합적·이타주의적·평등주의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이 개인주의적·이기적·반평등주의적 가치를 지닌 사람보다 복지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중섭, 2009). 대부분의 연구결과 평등주의·좌파적 성향을 지닌 사람일수록 그 반대 성향의 사람보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ilens, 1995; Andress & Heien, 2001; Feldman & Steenberg, 2001; Blekesaune & Quadagno, 2003; 주은선·백정미, 2007). 한편, 빈곤층 및 수급자가 정서적 문제 혹은 도박, 음주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나태하다고 여기는 등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복지정책이나 복지지출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mith, 1987; Gilens, 1995; Cybelle, 2004; Gilens, 2009; 이호, 1996).

국가비교 연구로는 복지레짐이 복지태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로 고려되었다. 백정미 외(2008)는 Esping-Anderson(1999)의 레짐 구분에 따라 시민주의 복지국가(스웨덴), 보수주의 복지국가(프랑스), 자유주의 복지국가(미국)의 복지태도를 살펴본 결과 국가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 간 복지태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한 연구(Svallfore, 1997; Edlund, 1999; Andress & Heien, 2001)도 찾아볼 수 있지만, 반면 국가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거나 Esping-Andersen(1999)의 레짐론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Beane & Papadakis, 1998; Gelissen, 2000; 백정미 외, 2008 재인용). 신섭중과 박병현(1995)은 레짐이 아닌 한국사회의 경험과 성격을 중점에 두고 동질적 국가로 분류되는 일본, 이질적 국가로 분류되는 미국을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여 국가 간 복지태도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 3. 형평성지각과 복지태도

형평성(equity) 개념은 정의(justice), 공정(fairness) 및 평등(equality) 등의 개념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기여에 대한 보상, 또는 배분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

나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를 포함하는 정의 개념과 유사하게 규정되기도 한다(김석준, 1991; 임현만, 2003 재인용). 형평성과 관련된 고전적 담론인 Adams(1965)의 형평성이론(equity theory)에서는 조직구성원이 자신이 기여한 부분과 자신이 받은 보상 비율을 다른 사람의 비율과 비교하여 동일하다고 인식하면 공정성을, 그렇지 않으면 불공정성을 느끼며, 이 같은 분배공정성이 조직구성원의 직무태도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Greenberg, 1990; 김호균, 2007 재인용), 이러한 전제에 따라 분배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에 대한 지각이 조직구성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중요시되어 왔다.<sup>4)</sup> 형평성지각(equity perception)은 이러한 분배공정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선행연구에서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어 왔는데(남승규, 1999; 임현만, 2003; 노용진, 2007),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배분적 정의의 구현 상태에 대한 주관적 지각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우아영, 2000).

본 연구에서는 조직수준에서의 분배공정성에 대한 지각이 직무태도나 직무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조직에 대한 신뢰수준을 높인다는 실증적 결과(Farkas & Tetrick, 1989; Greenberg, 1990; McFarlin & Sweeney, 1992; 김호균, 2007)의 적용범주를 확대하여 사회 전반적 형평성의 지각이 형평성을 본질적 가치로 가지며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전제는 주관적 지각이 사회적 행동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며, 인지, 감정, 행동의도를 포함하는 태도의 전체요소의 한 부분이면서 또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또한 본 연구는 복지태도의 영향요인으로 전통적으로 다루어진 계급이외의 요인, 즉 정치의식(김영란, 1995; 주은선·백정미, 2007; 이중섭, 2009), 사회적 의식(이성균, 2002; 김신영, 2010), 이해관계(주은선·백정미, 2007)를 고려하는 연구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연구에서도 형평성지각을 복지태도의 영향요인으로 고려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 수준에서 수행되어 왔다. 유사한 의미에서 활용된 변수로 ‘사회공정성

4) 그러나 이러한 Adams의 형평성 이론이 불공정성에 대한 반응을 명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Cropanzano & Greenberg, 1997) 보상의 총량을 결정하는 데 이용되는 수단이나 절차가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한 인지정도를 의미하는 절차공정성의 개념이 등장한다(박철민, 김대원, 2004; 김호균, 2007 재인용).

인식', '평등현실에 대한 인식', '사회불평등의식', '사회적 신뢰' 등이 있는데, 이해경과 최재성(1997)은 '사회공정성인식'을 '사회가 정의를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으로 보고 이를 배분적 정의와 연결지어 '소득배분의 공정성', '기회의 균등', '조세제도의 진보성', '주택정책의 공공성', '사회복지서비스의 충분성'의 항목으로 하위차원을 구성하여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최균과 류진석(2000)은 전술한 연구에서 '평등현실에 대한 인식'을 가치차원에 포함하여, 교육기회, 취업기회, 법의 집행, 도시와 농촌의 생활격차, 소득격차, 재산소득격차,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 성별 간 차별의 각 영역에 대해 평등하다고 지각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은 형평성지각과 유사한 의미로 파악되나, 복지태도와의 관련성은 실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김신영(2010)이 제시한 '사회적 신뢰'의 개념도 형평성지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동 연구자는 사회적 신뢰를 사회적 자본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고, 특히 공식적 제도에 의해 생산되는 신뢰인 제도의존적 신뢰에 주목하였는데, 그 측정이 다소 추상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한계는 있으나, 사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감을 물음으로써 넓은 의미로 처우의 공정성을 포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사회적 신뢰가 복지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즉 사회적 신뢰감이 높을수록 국가의 공적복지 책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균(2002)의 연구에서는 '사회불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즉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지각할수록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형평성지각을 소득분배의 형평성과 세금부담에 대한 형평성의 두 영역에서 측정하여, 각 형평성의 지각수준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정당한 보상', 즉 전통적인 '분배공정성'을 의미하는 소득분배 형평성과 더불어 세금부담 형평성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복지국가의 재원이 조세이며, 적정 수준의 복지지출을 위해서는 복지지출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세부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최준욱, 2006). 세금부담 형평성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이 호의적이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공평을 찾기 위해 조세회피 행위가 부단히 일어날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에(권영모, 1995) 납세자들의 세금부담 형평성에 대한 인식은 복지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변수 중 하나이다.

### Ⅲ. 연구 방법

####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2007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2차년도 조사에서 모두 6,580가구, 13,478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이 중 지역별 층화단순임의표집에 의해 1,259가구를 추출하여 가구주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부가조사로 '복지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지인식조사는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 복지재원 및 대상범위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정치적 인식과 태도에서는 사회계층에 대한 인식, 소득분배와 관련된 인식, 정부의 역할과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 대한 인식 등을, 복지재원 및 대상범위에는 세금부담에 대한 인식 등이 질문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최종분석에 활용한 표본 수는 총 1,693명이었다.

#### 2. 주요변수의 측정도구

#####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복지태도는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 소득격차 해소에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으로 측정하였다. 각 변수는 4~7점의 서열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복지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코딩하였다.

##### 나. 독립변수: 형평성지각

독립변수로 설정한 '형평성지각'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주관적 지각으로, 응답자가 지향하는 가치는 내포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하였다. 형평성지각은 소득분배 형평성지각과 세금부담 형평성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변수는 7점 리커트식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형평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하도록 코딩하였다.

표 2. 종속변수 측정도구

(단위: %)

구분	질문	변수값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	성장과 분배 중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성장만이 중요 ~ 4=분배만이 중요
소득격차 해소에의 국가 책임에 대한 태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1=매우 반대한다 ~ 5=매우 동의한다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십니까?	1=매우 반대한다 ~ 7=매우 동의한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가난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어느 방안으로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난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 5=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표 3. 독립변수 측정도구

(단위: %)

구분	질문	변수값
소득분배 형평성지각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매우 불평등하다 ~ 7=매우 평등하다
세금부담 형평성지각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1=매우 그렇다 ~ 7=매우 그렇지 않다

## 다. 통제변수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된 성별, 연령, 종교유무와 장애유무, 교육수준, 혼인상태, 종사상 지위, 가구지위와 거주지역을 통제 변수로 설정하였다.

표 4. 통제변수 측정도구

구분	변수값
성별	1=남자, 2=여자
연령	연속변수로 측정
교육수준	1=중학교 이하, 2=고등학교, 3=대학교 이상
혼인상태	1=배우자 있음(기혼·동거), 2=사별·이혼·별거, 3=미혼
종교유무	1=종교있음, 2=종교없음
장애유무	1=장애있음, 2=장애없음
경제활동상태	1=임금근로자, 2=고용주 및 자영업자, 3=실업자, 4=비경제활동인구 5=공공 및 자활근로 참여자, 6=무급가족종사자
가구지위 <sup>1)</sup>	1=일반, 2=저소득
거주지역	1=특별, 광역시, 2=시, 군, 도농복합군

주: 1) 중위균등화소득의 60%미만인 경우 저소득, 60% 이상인 경우 일반

### 3.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원자료를 연구목적에 맞게 더미코딩 등의 가공 절차를 거쳐 SPSS 12.0 package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형평성지각, 복지태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형평성지각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각 종속변수에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동시에 투입하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모형에서는 독립변인들과 종속변수간의 선형관계를 가정하였으므로, 회귀식의 추정방법은 오차항의 제곱합을 최소로 하는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을 활용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766명으로 45.2%, 여성이 927명으로 54.8%를 차지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70세 이상이 416명으로 34.2%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386명으로 22.8%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의 평균은 약 57세, 표준편차는 15.31이었다.<sup>5)</sup>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기혼·동거)가 1,336명으로 79.0%를 차지하여 대다수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다. 교육수준은 중학교이하, 고등학교, 대학교이상의 세 수준으로 구분하였는데, 유효응답자 1,662명 중 중학교이하가 807명으로 47.7%를 차지하여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734명으로 43.4%, 종교가 있다는 응답이 957명으로 56.6%를 차지하였고, 장애유무는 장애인이 156명으로 9.2%를 차지하여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비장애인임을 알 수 있었다. 경제활동상태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655명으로 38.7%를, 임금근로자(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포괄)가 599명으로 35.4%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고용주 및 자영업자가 280명으로 1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지위는 일반가구가 1,056명으로 62.4%, 저소득가구가 637명으로 3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733명으로 43.3%, 시, 군, 도농복합군이 960명으로 56.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

5) 한국복지패널의 부가조사는 표본가구의 가구주와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집단보다 평균연령이 높게 나타난다.

표 5.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n=1,693)	남자	766	45.2
	여자	927	54.8
연령 (n=1,693) M≒56.6세 SD=15.31	20세 이상 30세 미만	19	1.1
	30세 이상 40세 미만	244	14.4
	40세 이상 50세 미만	386	22.8
	50세 이상 60세 미만	298	17.6
	60세 이상 70세 미만	330	19.5
결혼상태 (n=1,692)	배우자 있음	1,336	79.0
	사별 · 이혼 · 별거	287	17.0
	미혼	69	4.1
교육수준 (n=1,662)	중학교 이하	807	47.7
	고등학교	534	31.5
	대학교 이상	352	20.8
종교유무 (n=1,691)	종교없음	734	43.4
	종교있음	957	56.6
장애유무 (n=1,693)	장애	1,537	90.8
	비장애	156	9.2
경제활동상태 (n=1,693)	임금근로자	599	35.4
	고용주 및 자영업자	280	16.5
	실업자	40	2.4
	비경제활동인구	655	38.7
	공공 및 자활근로 참여자	15	0.9
	무급가족종사자	104	6.1
가구지위 (n=1,693)	일반	1,056	62.4
	저소득	637	37.6
거주지역 (n=1,693)	특별시, 광역시	733	43.3
	시, 군, 도농복합군	960	56.7

## 2. 형평성지각 및 복지태도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소득분배 및 세금부담 형평성에 대한 지각은 두 변수 모두 7점 척도에서 평균이 3점 미만으로 나타나 형평성 수준을 매우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득분배 형평성은 평균 2.17점, 세금부담 형평성은 평균 2.61점으로 소득분배 형평성보다는 세금부담 형평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즉 소득분배는 형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세금납부는 상대적으로 형평하게 부담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형평성지각 관련 특성

(단위: %)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소득분배 형평성지각 (n=1,674)	1.00	7.00	2.17	1.31
세금부담 형평성지각 (n=1,678)	1.00	7.00	2.61	1.30

조사대상자의 복지태도 관련 특성은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은 4점 척도에서 평균이 2.40(표준편차=.75)점으로 나타나 성장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소득격차 해소에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는 5점 척도에서 3.93점의 평균을 나타내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가책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준편차=.95). 다음으로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는 7점 척도에서 4.21점의 평균을 보여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준편차=1.67). 마지막으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은 5점 척도에서 평균이 3.22점으로 나타나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이 다소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표준편차=1.38).

표 7. 복지태도 관련 특성

(단위: %)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 (n=1,673)	1.00	4.00	2.40	.75
소득격차 해소에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 (n=1,622)	1.00	5.00	3.93	.95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n=1,675)	1.00	7.00	4.21	1.67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 (n=1,675)	1.00	5.00	3.22	1.38

### 3. 주요변수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형평성지각과 복지태도에 대한 단순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소득분배 형평성지각과 세금부담 형평성지각 간( $r=.159, p<.001$ ),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과 소득격차 해소에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 간( $r=.053, p<.05$ )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소득분배 형평성지각과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이( $r=-.080, p<.01$ ), 소득격차 해소에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와 소득분배 형평성지각( $r=-.205, p<.001$ ), 세금부담 형평성지각( $r=-.143, p<.001$ )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표 8. 주요변수간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1. 소득분배 형평성지각	1					
2. 세금부담 형평성지각	.159***	1				
3.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	-.080**	.003	1			
4. 소득격차 해소에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	-.205***	-.143***	.053*	1		
5.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044	-.012	-.016	.002	1	
6.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	-.015	-.047	-.021	.022	-.031	1

# $p<.1$ , \* $p<.05$ , \*\*  $p<.01$ , \*\*\*  $p<.001$

#### 4. 연구모형검증

형평성지각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 '소득격차 해소에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 4개의 변수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 분석 이전,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분석한 결과 모든 모형의 모든 변인에서 VIF가 6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먼저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은 투입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에 의해 종속변수의 변량이 1.9% 정도 설명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개별 회귀계수들의 영향력을 검증했을 때는 독립변수 중 소득분배 형평성지각이( $\beta=-.079, p<.01$ ), 통제변수 중 가구지위가( $\beta=-.071, p<.05$ )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분배 형평성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또 저소득가구보다 일반가구가 분배보다는 성장을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소득분배가 형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저소득 가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분배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종속변수가 '소득격차 해소에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인 경우, 투입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가 종속변수의 변량을 6.3%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소득분배 형평성지각( $\beta=-.186, p<.001$ )과 세금부담 형평성지각( $\beta=-.111, p<.001$ )은 모두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통제변수 중에서는 종교유무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57, p<.05$ ). 이와 같은 결과는 소득분배 형평성 수준과 세금부담 형평성 수준을 낮게 지각할수록, 또 종교가 있는 경우에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국가책임이 보다 크다고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가 종속변수인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가 종속변수의 변량을 1.8%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에는 소득분배 형평성지각이( $\beta=.049, p<.1$ ), 통제변수 중에는 경제활동형태 중 비경제활동인구( $\beta=-.064,$

6)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 이상일 때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김두섭·강남준, 2000; 이익섭 외, 2007 재인용).

표 9. 형평성지각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		소득격차 해소 에의 국가책임 에 대한 태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	
		b	$\beta$	b	$\beta$	b	$\beta$	b	$\beta$
독립 변수	소득분배 형평성지각	-.046**	-.079	-.135***	-.186	.062#	.049	-.017	-.016
	세금부담 형평성지각	.005	.009	-.080***	-.111	-.023	-.018	-.027	-.026
통제 변수	성별 <sup>1)</sup>	.067	.045	.014	.007	-.160	-.048	-.138#	-.050
	연령	-.001	-.015	-.002	-.029	.006	.051	-.007*	-.081
	교육수준 <sup>2)</sup>								
	고등학교 이하	-.060	-.037	-.013	-.007	-.071	-.020	.336***	.113
	대학교 이상	-.074	-.040	-.072	-.031	.046	.011	.552***	.162
	혼인상태 <sup>3)</sup>								
	배우자있음	.040	.022	.061	.026	.258	.063	-.024	-.007
	사별 · 이혼 · 별거	.012	.006	.064	.025	.316	.071	.042	.011
	종교유무 <sup>4)</sup>	-.006	-.004	.108*	.057	-.016	-.005	-.022	-.008
	장애유무 <sup>5)</sup>	-.107	-.041	.089	.027	.145	.025	.004	.001
	경제활동형태 <sup>6)</sup>								
	고용주 및 자영업자	-.056	-.028	.006	.002	-.116	-.026	.182#	.049
	실업자	.093	.019	-.085	-.014	.146	.013	.344	.038
	비경제활동인구	-.074	-.049	.040	.021	-.214#	-.064	.234*	.084
	공공 및 자활근로 참여자	.188	.024	-.245	-.025	-.091	-.005	.031	.002
	무급가족종사자	.070	.023	-.050	-.013	-.057	-.008	-.105	-.018
가구지위 <sup>7)</sup>	-.110*	-.071	.083	.042	-.172#	-.050	.120	.042	
거주지역 <sup>8)</sup>	-.005	-.003	.059	.031	-.122	-.036	-.022	-.008	
상수		2.636		4.339		3.913		3.419	
R <sup>2</sup>		.019		.063		.018		.057	
Adjusted R <sup>2</sup>		.008		.053		.008		.047	

#p<.1, \*p<.05, \*\* p<.01, \*\*\* p<.001

주: 1) 여자=0, 남자=1

2) 참조그룹: 중학교 이하

3) 참조그룹: 미혼

4) 종교없음=0, 종교있음=1

5) 장애없음=0, 장애있음=1

6) 참조그룹: 임금근로자

7) 저소득=0, 일반=1

8) 서울특별시/광역시=0, 시/군/도농복합군=1

$p < .1$ )와 가구지위( $\beta = -.050, p < .1$ )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분배가 형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임금근로자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저소득가구보다 일반가구가 사회복지의 확대를 위한 증세에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이 종속변수인 경우에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량을 5.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형평성지각이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지향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통제변수 중 성별( $\beta = -.050, p < .1$ ), 연령( $\beta = -.081, p < .05$ ), 교육수준 중 고졸 집단( $\beta = .113, p < .001$ )과 대졸이상 집단( $\beta = .162, p < .001$ )이, 그리고 경제활동형태에서는 고용주나 자영업자( $\beta = .049, p < .1$ )와 비경제활동인구( $\beta = .084, p < .05$ )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중졸이하 집단보다 고졸이나 대졸이상 집단이, 임금근로자보다 고용주나 자영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선별주의보다는 보편주의를 선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세한 결과는 아래의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태도와 형평성지각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친복지적 태도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은 주관적 지각이 태도의 하위요소를 구성하면서 전체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태도이론에서 출발하였으며, 실증적 검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2007년도) 중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종속변수인 복지태도는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지향', '소득격차 해소에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의 네 가지 하위변수로 측정하였으며, 독립변수인 형평성지각은 소득분배 형평성지각과 세금부담 형평성지각으로 나누어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형평성지각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을 제외하고는 복지태도에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변수에서는 가구지위가 성장과 분배 지향과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에, 종교의 유무가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에, 경제활동

형태가 증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소득 계층과 복지태도에 관한 선행연구(Hansenfeld & Rafferty, 1989; 주은선·백정미, 2007; 김신영, 2010)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른 종속변수와 달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지향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가 전술한 바와 같이 재분배효과의 극대화와 관련하여 진보와 보수로 일관되게 구분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닌 것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 보편주의를 일관되게 ‘복지확대’의 기조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맥락 속에서 작용하는 선별·보편주의의 양상과 이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지향에 대한 통제변수의 영향력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낮을수록 보편주의 지향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여성(Blomberg et al., 1996; Svallfore, 1997; Edlund, 1999; Scott et al., 2001; Blekesaune & Quadagno, 2003)과 저연령층(Hansenfeld & Rafferty, 1989; Andress & Heien, 2001; 주은선·백정미, 2007)이 보다 복지 지향적이라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중졸 집단보다 고졸 및 대졸이상 집단이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고된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복지 지향적이라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Andress & Heien, 2001; Goerres, 2007; 주은선·백정미, 2007; 임완섭·김문길, 2008)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이 부분 역시 후속연구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형평성지각의 유형과 복지확대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리사회의 소득분배 형평성 수준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성장보다는 분배를 지향하며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국가책임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금부담이 형평하지 못하다고 지각할수록 국가의 복지책임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불평등인식이 높을수록 복지확대를 지지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이성균, 2002)를 지지하나, 사회적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단기적 이해보다는 장기적 이득을 고려하게 하여 복지확대를 지지한다고 보고한 김신영(2010)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사회가 형평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믿을만하다’고 생각할 때 복지확대에 대한 지지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현실의 평등에 대해서는 비판적 견해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와 그 성원에 대한 낙관은 잃지 않는 ‘비판적 낙관주의’ 적 성향과 매우 유사하며, 이

러한 인지가 친복지적 태도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집합주의, 휴머니즘과 낙관주의가 친복지적 태도라는 최균과 류진석(2000)의 진술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소득분배의 형평성 수준을 낮게 지각할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결과는 형평성지각이 일관된 방향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즉, 형평성지각 수준이 낮을수록 성장보다는 분배, 국가의 복지책임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 경우에는 형평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복지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김상균·정원오, 1995; 최균·류진석, 2000; 허만형, 2009), 최균과 류진석(2000)은 한국인의 복지의식의 이러한 특성을 ‘이중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빈곤원인에 대해서는 개인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등현실에 대해서는 집합주의적인 가치를 수용하는 경향, 복지예산확대에 동의하고 복지시행에서 국가책임 지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를 위한 세금납부에는 반대하는 모습 등 인식과 실천의 지에서의 불일치가 이러한 이중성을 잘 보여주는데, 동 연구자는 이를 복지의식 유형 구분에서 복지책임 면에서는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지만, 복지실천과 관련된 비용부담 측면에서는 매우 소극적인 ‘국가의존소극책임형’으로 구분하였다(최균·류진석, 2000).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형평성 수준을 낮게 지각할수록 성장보다는 분배를 지향하고 국가의 책임정도를 높게 인식하나,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의 증가에는 반대하는 양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친복지적 태도의 확대를 위한 개입의 초점으로 ‘비판적 낙관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판적 낙관주의는 현실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은 비판적으로 바라보되 능동적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사회적 동력에 대한 신뢰는 잃지 않는 것이며, 넓게는 이 변화를 위한 행동의지까지 포괄한다. 실상 거시적 범주에서의 사회복지의 확대와 축소가 우연적인 역사적 사건에 좌우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사회 성원이 사회복지의 확대를 수용하는 근거에는 비판적 낙관주의와 유사한 가치-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주의를 우선하고, 이기주의보다는 이타주의를 우선하는 가치-가 내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방도로 비판적 낙관주의에 대한 개입을 통해 이를 촉진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비판적 낙관주의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요청될 것이다.

둘째, 복지국가의 기반이 되는 세금납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형평성지각 수준이 국가책임의 복지확대와 이를 위한 세금확대에 일관된 방향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이러한 이중성을 극복하기 위한 실제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촉구한다. 이를 위한 필수적 전제는 조세제도의 합리적 운용과 확대된 조세의 사회복지분야에의 투입,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투명한 예산집행과 함께 그 효과성의 객관적 검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이중섭, 2009).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 온 국가에 의한 복지확대나 사회복지예산증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뿐 아니라 성장과 분배,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태도 등 근본적 가치에 대한 지향을 복지태도의 하위범주로 개념화하였다는 점과 ‘주관적 지각’과 ‘선호와 불호의 방향을 나타내는 태도’를 구분하여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주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의 차별화된 성과를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설명력( $R^2$ )이 1.8%에서 6.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설정한 종속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고려되어 온 주관적 계급의식, 공공복지 수급 경험, 복지욕구 등을 다루지 못했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의 포괄적 관계를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한나는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으로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장애와 젠더, 건강불평등이며, 현재 ICF를 적용한 한국의 장애분류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E-mail: nazlove@paran.com).

이미라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불어학과 경제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장애인복지, 건강불평등이며, 현재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구직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E-mail: miralee718@gmail.com).

## 참고문헌

---

- 권영모(1995). 조세공평성 인식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6, pp.189-210.
- 김두섭, 강남준(2000). 회귀분석: 기초와 응용. 서울: 나남출판.
- 김상균(1985). 한국대학생의 복지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7(4).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상균, 정원오(1995). 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5, pp.1-33.
- 김석준(1991). 한국의 국가성격과 관료의 형평의식. 한국행정학보, 25(3), pp.727-751.
- 김성한(1990). 보건사회부 관료의 복지이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김신영(2010).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1(1), pp.87-105.
- 김영란(1995). 이데올로기와 복지태도. 고려사회학논집, 9, pp.229-249.
- 김영모(1980). 한국인의 복지의식. 서울: 일조각.
- 김호균(2007). 조직공성성인식, 조직신뢰, 조직시민행동간 영향관계분석. 한국행정학보, 41(2), pp.69-94.
- 김희자(1999). 한국인의 복지태도의 분화. 사회복지정책, 8, pp.106-124.
- 남승규(1999). 소비자만족이론. 사회과학논문집, 31, pp.145-166.
- 노용진(2007). 비정규 고용비율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편익과 비용의 균형적 관점. 산업관계연구, 17(2), pp.101-126.
- 류만희, 최영(2009).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 복지의식, 계층, 자기이해(self-interest)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pp.191-210.
- 미야모토 타로(2005). 복지국가전략: 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서울: 논형. 임성근(역).
- 박병현, 홍봉선(1995).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14(1), pp.85-110.
- 박순일(2005). 경제성장과 분배의 갈등과 상생 그리고 고령화의 영향. 한국사회정책, 12(1), pp.7-64.

- 박철민, 김대원(2004). 공정성과 조직시민행동의 행정서비스 질에 대한 영향분석: 제안모형과 경쟁모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38(1), pp.115-136.
- 백정미, 주은선, 김은지(2008). 복지인식 구조의 국가간 비교: 사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와 한국. 사회복지연구, 37, pp.319-344.
- 신섭중, 박병현(1995). 한국, 일본, 미국의 복지인식 비교연구: 부산, 오사카,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27, pp.181-207.
- 안상훈(2009). 한국의 친복지태도 결정요인과 그 경로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16(1), pp.163-192.
- 안치민(1995).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과 계급. 사회와 문화, 9(1), pp.211-227.
- 양옥경(2002).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복지인식 연구: 서울지역 기혼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1, pp.229-256.
- 우아영(2000). 복지인식에 관한 사회계층간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서울.
- 이성균(2002). 한국사회 복지인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국가의 복지책임지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2).
- 이익섭, 김동기, 이한나(2007). 자립생활서비스 이용과 지역사회참여 및 고용의 관계와 역량강화의 매개효과. 직업재활연구, 17(1), pp.5-24.
- 이중섭(2009). 한국인의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4), pp.73-99.
- 이혜경, 최재성(1997). 한국인의 사회불공정성인식의 특성과 사회복지에의 함의. 사회과학연구, 28, pp.99-123.
- 이호(1996). 빈민복지에 관한 의식조사 및 분석. 도시와 빈곤, 23, pp.1-18.
- 임완섭, 김문길(2008). 종사상 지위별 소득재분배에 대한 선호의 차이와 그 결정요인. 제1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pp.23-40.
- 임현만(2003). 병역정책의 형평성 분석모형의 정립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1), pp.369-390.
- 조돈문(2001). 복지인식의 계급효과와 공사부문 효과. 산업노동연구, 7.
- 주은선, 백정미(2007). 한국인의 복지인식 지형: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 pp.203-225.

- 최균, 류진석(2000). 복지의식의 경향과 특징: 이중성. *사회복지연구*, 16, pp.223-254.
- 최준욱(2006). 복지지출에 대한 장기적 시각에서의 고찰. *월간 재정포럼*, 120, pp.6-20.
- 한덕웅, 성한기, 강혜자, 이경성, 최훈석, 박근석 외(2008). *사회심리학*. 서울: 학지사.
- 허만형(2009).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정향분석: 서울시민의 복지의식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2), pp.99-118.
- 허순임(2008). 건강보험 관련 복지인식. *보건복지포럼*, 145, pp.32-42.
- Adams, J. S. (Ed).(1965). *Inequity in social exchange in Berkowitz*. *Advances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 Andress, H. J., Heien, T.(2001). Four worlds of welfare state attitudes? A comparison of Germany,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 pp.337-356.
- Bean, C., Papadakis, E.(1998). A comparison of mass attitudes towards the welfare state in different institutional regimes, 1985-1990.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0(3).
- Blekesaune, M.(2006). *Economic conditions and public attitudes towards welfare state policies*. ISER Working Paper. pp.06-45.
- Blekesaune, M., Quadagno, J.(2003).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state polic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24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9, pp.415-427.
- Blomberg, H., Kroll, C., Suominen, S., Helenius, H.(1996). Social class and attitudes towards cuts in the welfare system in Finland. *Socialklass och attityderna till nedskärningar i välfärdssystemet i Finland*. 33(4), pp.57-78.
- Bradshaw, J., Mayhew, E.(2004). Public attitudes to dependency and the welfare stat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 Research*, 46(1), pp.49-63.
- Breckler, S. J.(1984). Empirical validation of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as distinct components of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pp.384-389.
- Brooks, C., Manza, J.(2006). Why do welfare states persist? *The Journal of Politics*, 68(4), pp.816-827.
- Cropanzano, R., Greenberg, J.(1997). *Progress in organizational justice: tunneling through*

- the Maze*. In Cooper, C. L. & Robertson, I. T.(Eds.) *International Review of Industrial & Organizational Psychology*, 12, John Wiley and Sons.
- Cybele, F.(2004). Changing color of welfare?: Whites' attitudes toward latinos influence support for welfar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0(3), pp.580-625.
- Edlund, J.(1999). Trust in government and welfare regimes: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nd financial cheating in the USA and Norwa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5, pp.341-370.
- Elim, P., Clive, B.(1993). Popular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A comparison between institutional regimes. *Journal of Publisher*, 13(3), pp.227-254.
- Esping-Andersen, G.(1999). *Social foundation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 Eyestone, R.(1978). *From social issues to public polic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Farkas, A. J., Tetrick, L. E.(1989). A three-wave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causal ordering of satisfaction and commitment on turnover decis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4(6), pp.855-868.
- Fazio, R. H., Powell, M. C., Herr, P. M.(1983). Toward a process model of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 Accessing one's attitude upon mere observation of the attitude obj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4), pp.723-735.
- Feldman, S., Steenbergen, M.(2001). The humanitarian foundation of public support for social welfar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 pp.658-677.
- Fishbein, M.,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MA: Addison-Wesley Publishing.
- Gelissen, J.(2000). Popular support for institutionalized solidarity: a comparison between European welfare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9, pp.289-300.
- Gemmell, N., Morrissey, O., Pinar, A.(2003). Tax perceptions and the demand for public expenditure: evidence from UK micro-data.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4), pp.793-816.
- George, V. & Wilding, P.(1994) "Welfare and Ideology" Person Education Limited London, U. K.

- Gilbert, N., Specht, H.(1974).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Prentice-Hall.
- Gilens, M.(1995). Racial attitudes and opposition to welfare. *The Journal of Politics*, 57, pp.994-1014.
- \_\_\_\_\_.(2009). Racial attitudes and race-neutral social policies: White opposition to welfare and the politics of racial inequality.
- Goerres, A.(2007). *Demands for welfare state provisions by a powerful generation: comparing British and German baby-boomers*. Paper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2007 Bi-annual conference of the European consortium of political research, September 6-8, 2007.
- Goren, P.(2008). The two faces of government spending.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1(1), pp.147-157.
- Greenberg, J.(1990). Organizational justice: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Journal of Management*, 16, pp.393-432.
- Hansenfeld, Y., Rafferty, J. A.(1989).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Social Forces*, 67, pp.1027-1048.
- Jones, C. O.(1984).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policy* (3rd ed.). Monterey,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Koster, F.(2008). *The European union's impact on welfare state attitudes: a longitudinal and multilevel investigation*. Paper prepared for the 38th world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ology budapest, June 26-30.
- Mads, M. J.(2006). Welfare regimes and attitudes towards redistribution: The regime hypothesis revisited.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2(2), pp.157-170.
- Matthews, J. S., Erickson, L.(2008). Welfare state structures and the structure of welfare state support: attitudes towards social spending in Canada, 1993-2000.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7(4), pp.411-435.
- McFarlin, D. B., Sweeney, P. D.(1992).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as predictors of satisfaction with personal and organizational outcomes. *Th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5(3), pp.626-637.
- Page, B. I. & Shapiro, R. Y.(1983). "Effects of public opinion on public policy". American

- Political Science Review. 77: 175-90.
- Rosenberg, M. J., Hovland, C. I.(1960).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components of attitudes*. In C. I. Hovland & M. J. Rosenberg (Eds). *Attitude organization and change: an analysis of consistency among attitude component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p.1-4.
- Scott, J. T., et al.(2001). Just deserts: an experimental study of distributive justice Norm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44), pp.749-767.
- Smith, T.(1987). That which they call welfare by any other name would smell sweeter: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question wording on response patterns. *Public Opinion Quarterly*, 51, pp.75-83.
- Svallfors, S.(1995). The end of class politics? structural cleavages and attitudes to swedish welfare policies. *Acta Sociologica*, 38, pp.53-74.
- \_\_\_\_\_.(1997). Worlds of welfare and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 comparison of eight western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3, pp.283-304.
- \_\_\_\_\_.(2004). Class, attitude and the welfare state: Sweden in comparative perspective.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8(2), pp.119-138.
- Taylor-Gooby, P.(1985). *Public opinion, ideology, and state welfare*. Routledge Kegan & Paul.
- Wong, T. K. Y., Wan, S. P. S., Law, K. W. K.(2009). Welfare attitudes and social class: The case of Hong Kong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8(2), pp.142-152.

#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Welfare Attitudes of Korean : Analyzing Effects of Equity Perception

**Lee, Han Na**  
(Yonsei University)

**Lee, Mi Ra**  
(Yonsei Universit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vise a method to spread the pro-welfare attitudes by defin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attitude and equity perception. The analysis data for this study is the additional research data from the 2nd Korea Welfare Panel Survey(2007). The welfare attitude, the dependent variable, is measured by 'the preference between economic growth and distribution', 'the attitude towards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reducing the income gap', 'the attitude towards tax-increase for strengthening the welfare', and 'the preference between selectivism and universalism'. The equity perception, which is the independent variable, is estimated with 'the equity perception on income distribution' and 'the equity perception on tax burden'. As for the statistical method, a multiple regression model which puts both independent variables and control variables is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ower level of the equity perception on income distribution is associated with the higher preference for distribution. Second, the lower levels of the equity perceptions on income distribution and tax burden are related to the higher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of reducing the income gap. Third, the higher level of the equity perception on income distribution is associated with the higher positive attitude towards tax-increase for strengthening the welfare. No relation is found between 'the level of the equity perception' and 'the preference between selectivism and universalism'. Th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he prevention of 'the critical optimism' in order to reach the national agreement on strengthening the welfare. Also, it stresses the need of the strategy to broaden the national agreement on tax payment solving the duplicity towards the welfare attitude.

---

**Keywords:** Welfare Attitude, Economic Growth and Distribution, Selectivism and Universalism, Equity Perception on Income Distribution, Equity Perception on Tax Burden, Critical Optimism